



한강의 기적,
그 경험과 미래
그리고
기업가정신

사공 일 지음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한강의 기적, 그 경험과 미래, 그리고 기업가정신

1판 1쇄 발행 2013년 5월 31일

펴낸이 사공 일
책임편집 송경진
디자인 공감의기쁨

펴낸곳 세계경제연구원
전화 02)551-3334~7
팩스 02)551-3339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한강의 기적,
그 경험과 미래,
그리고 기업가정신



사공 일

- 1964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 1966 미국 UCLA 석사
- 1969 미국 UCLA 박사

- 1993~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2009~2012 제27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 2009~2011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준비위원장
- 2008~2009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 2003~ 고려대 석좌교수
- 2000~2002 대외경제통상대사
- 1998~2000 ASEM비전그룹 의장
- 1989~1992 IMF 특별고문
- 1987~1988 재무부 장관
- 1983~1987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 1983 산업연구원 원장
- 1973~1983 KDI 재정금융실장, 부원장
- 1981~1982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
- 1969~1973 미국 뉴욕대 교수

상훈

- 청조근정훈장
- 국민훈장 무궁화장
- 국민훈장 모란장
- 중화민국 대수경성훈장
- 벨기에 국왕 왕관대관장
- UCLA 총장상
- 한국통번역사협회 '올해의 연사상'
- 고려대 정책인대상

저서

-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세계 속의 한국경제 *Korea in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IIE, 1991)
- 《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2001)
- 《한국무역 프리미엄 시대 열자》(2013)
- 《한국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2013) 외 다수

한강의 기적,
그 경험과 미래,
그리고 기업가정신*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前 재무장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서울경제신문> 김인영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 글은 2013년 5월 30일 <서울경제신문> '서울포럼'의 기조연설문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동안에 오늘날의 서방 선진 제국이 산업혁명 이후 적어도 3~4세대에 걸쳐 이룩한 정도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선진국의 일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발전사에 크게 기록될 이러한 한국경제의 눈부신 도약상은 ‘한강의 기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칭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명실상부한 일류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경제가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이 시점에

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이란 주로 민간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여건, 혹은 기업친화적 business-friendly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중견·대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기업하려는 의지가 최대한 북돋워질 수 있고,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생산적인 기업활동으로 유인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마련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록 하는 ‘유인체제 incentive system’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인체제는 금전적인 인센티브 pecuniary incentive 뿐 아니라,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호의와 인정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non-pecuniary incentive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경제는 미국의 원조당국마저 경제발전에 관한 한 ‘희망이 없는 나라 basket case’로 치부할 정도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저조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저조했던 기업활동마저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이른바 ‘지대추구 rent-seeking’ 활동에 치우치는 상황 하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 라이선스와 외환배정 특혜만 얻어 쉽게 돈 벌 수 있는 windfall gain 길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전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960년대 초에 들어와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의 ‘개발연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도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동안 저조했던 생산적인 기업활동이 크게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되어 온 기존의 기업활동이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적 기업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영합적 기업가활동 zero-sum entrepreneurship이 정합적 기업가활동 positive-sum entrepreneurship으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적 기업가활동이 창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의 기업가정신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었고, 그 결과,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정부의 적절한 경제개발 전략과 함께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최대한 조장할 수 있는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주는 일이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수출주도의 ‘대외지향적 개발전략outward-looking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의 세계적인 석학과 전략가들 대부분은 대내지향적인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전략을 주장한 반면, 남미와 인도의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실제 수입 대체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채택했고 이 전략은 당시의 세계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출범한 이른바 가트-브레튼 우즈GATT-Bretton

Woods체제 하에서 유지되었던 자유무역과 금융·외환안정으로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에 유리한 여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발전략과 함께 정부는 기업하려는 의지를 최대한 북돋워, 특히 수출 관련 기업활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조세·금융·외환 등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에 더해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수출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하고 인정하는 각종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왕성한 기업가정신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그리고 새로운 시장개척이 이뤄졌고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을 통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한강의 기적이 이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

된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친화적 인센티브 제도가 창업과 신생 중소기업의 성장보다는 기존 대기업의 성장과 확장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운영·유지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균형적 성장과 함께 창업활동이 계속 저조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일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되어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연대의 정부주도적 개발전략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서 자원배분의 왜곡과 인플레이션 만성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와 강력한 물가안정화 시책과 함께 자율화, 개방화 시책을 펴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가파른 세계화 추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1990년대 말에는 환란換亂의 수도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란 외부적 충격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금융과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는 한층 더 튼튼해지고 국가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환란은 결과적으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가경쟁력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동태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빠르게 변화한 국제 경제여건과 우리 경제 자체의 내생적內生的 변화를 고려한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었어야 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돌려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도전과 과제,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8분기 동안 연속해 전기 대비 성장세가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볼 수 있는 0%대에 머물렀으며, 금년도 성장률은 2%대를 못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미국경제의 2~3% 수준의 회복세와 함께 우리에게는 특히 중요한 세계 제2대 중국경제가 8%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어렵기는 하지만 유럽경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의 침체

상을 외부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현 침체상은 세계 경제여건과 관련된 경기순환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과 연관이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7%대에 있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3% 중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그동안 크게 성숙했으며 인구 노령화 추세의 가속화 등 여러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류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임이 자명합니다.

경제 성장잠재력의 제고는 크게 다음 세 가지 길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과 자본투입을 극대화하는 것과 경제체제 자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동투입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보시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와 함께 근로 시간의 단축 추세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투입에 의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상당한 유휴 여성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 55.2%은 OECD 평균 62.1%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독일 71.8%, 영국 70.3%, 미국 67.6%, 프랑스 66.7%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이웃 일본 63.4%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써 우리의 경제 성장잠재력을 상당 수준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안목의 유희 여성인력 활용 방안 마련은 중요한 정책과제임에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주요 요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서 유래된 여성인력 공급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늘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긴급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임여성 근로자들의 지속 고용을 위한 공·사 보육시설의 확충과 출산·육아 관련 특별

지원제도를 좀 더 긴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간섭으로 고용시장을 더욱 경직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과 더불어 외국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차원의 이민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의 핵심으로 공교육의 획기적 개혁으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좀 더 긴 안목에서 창의력 넘치는 인력자원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남녀 인력의 공급을 최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구직求職난과 구인求人난이 공존하는 노동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나머지 두 가지 길인 자본 투입을 최대화하는 것과 우리 경제체제의 생산성 혹은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는 것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인은 현재 정부가 국정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창의력을 키우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북돋워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아울러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최대한 함양하

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목표는 최대한 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는 이른바 창조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사람의 창의력, 혹은 지적능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산업, 예를 들면 예술, 문화, 첨단기술과 ICT, 지적재산권이 경제와 융합되고 어우러진 새로운 산업을 통틀어 일컫는 기업과 산업적 차원

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인은 창조경제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함양되고, 기업하려는 의지가 증진될 수 있는 경제체제의 구축이 주목표가 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협의의 창조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체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중소·중견·대기업이 균형 있게 공존·공영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활발한 창업과 함께 기존 기업의 투자가 최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구체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어 슈페터 Jo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체제 혹은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미래창조과학부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창조산업뿐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산업, 농어업과 제조업은 물론이러니와 전통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각종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업가적 혁신 *entrepreneurial innovation*을 통한 창조적 파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의 핵심은 우리 국민 모두의 창의력과 기업하려는 의지를 앞서 지적인 정합적 기업활동으로 최대한 유인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적되어야 할 점은 과거 가트-브레튼 우즈 GATT-Bretton Woods체제 하에서 허용되었던 재정·금융·외환

을 통한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는 현재의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이고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활동에 도움이 될 연구개발 R&D 등의 간접적 지원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민간 기업과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어 이들의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함께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우리의 인센티브 체제 하에서 초래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저조한 창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창업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는 창의력 하나만으로 창업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제도금융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부나 사회가 벤처기업의 성공을 보장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처럼 벤처의 실패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봐주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패 확률이 높은 벤처의 실패 경력을 부정적 시각만으로 보는 문화가 지속되는 한 창업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력서에 벤처 실패 경험을 자랑으로 포함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창조산업의 기초가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비대칭적 힘을 가진 상대 경제주체, 이른바 갑甲의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막아주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 기업활동 자체가 위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중견기업과 공생·공영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있을 때 정부의 직접적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깊은 세계화시대에 기업이 입지를 하는 데에 있어 국경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책당국이 항상 깊이 명심할 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찾아 국내외 기업들은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업활동을 옥죄는 기존의 각종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되어야 합니다. 특히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에 국정의 힘이 실려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존 규제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합리성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니

다. 따라서 규제 일몰원칙 sunset principle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만들어진 규제를 없애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가칭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보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토록 해 실제 규제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없어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초 운영방식은 이러한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 입안과 집행을 위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 운영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존 공무원 채용제도와 병행해 특수·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이와 함께 산·관·학

전문인력의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창조산업 관련 부처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어 국내외 기업투자가 더욱 늘어나게 하는 일은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만 늘려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외 기업 투자여건 개선이 미흡해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한 사실과, 우리 경제보다 성숙한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업 투자여건 개선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노동과 자

본투입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제의 체제적 생산성, 즉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관해 생각해보도록 하지요. 총요소생산성의 실제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에 들어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저조한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우리 경제의 전반에 걸친 각종 제도를 합리화하고 투명화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의 창조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함은 물론이려니와 보건·의료, 교육, 관광·컨벤션을 포함하는 전통적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과 경쟁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제조업과의 격차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큼니다. 이들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제조업 부문의 지속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 자체도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러한 제반 경제적 측면의 노력과 함께 이른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OECD 평균에 비해 아주 저조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 풍조를 불식하고 법과 질서가 더욱 존중되고 더욱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크게 줄어들고, 그 결과 성장잠재력은 그만큼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적 노력은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창조적 파괴' 활동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왕성한 창조적 파괴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높은 성장이 이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또 다른 차원의 체제 보완적 노력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슈퍼더가 지적인 바와 같이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과 생산방식,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과 가정파탄, 기업 부도와 파산, 특정 지역경제

황폐화, 그리고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사회·정치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방안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더욱 심화된 지식기반사회적 현재 여건 하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복지제도 확립,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의 교육 개혁과 함께 근로자의 훈련·재훈련과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적절한 수준의 복지는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지속성장과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영합적인 지나친 복지는 당초 목표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

한 모든 정책적 노력이 이뤄질 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앞으로 5년 이내에 현재 3.5% 내외 수준에서 적어도 5% 수준으로 제고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1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낸 우리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걸맞은 정부의 비전 있는 국정운영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하려는 의지가 최대한 북돋워진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 또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의 기초가 될 경제 성장잠재력 향상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